

충남리포트 제115호

# ChungNam Report

2014. 07. 17.

##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 |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leejm21@kongju.ac.kr](mailto:leejm21@kongju.ac.kr)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kosh@cdi.re.kr](mailto:kosh@cdi.re.kr)

본 연구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의존적인 지방재정구조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개선 과제와 정책 대안을 검토·제시하는 데에 있음.

### 요 약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지출 경비를 충당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매우 부족한 세원배분 하에 과세자주권의 통제 및 중앙 정부 재정이전을 통해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양자를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시스템의 특징을 보임.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인데 최종적인 세출(지방교육재정 포함) 비중은 4:6으로 역전됨. 연방정부 형태의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큰 재정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소요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대규모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음.
  -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구조로 지방재정 수요 대응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세수의 빈약성을 보이는 데다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지방정부 세입·세출 활동의 자율성 제약과 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의 취약성 초래
  - 또한 공공서비스의 획일적 공급, 수익과 부담의 괴리 및 비용의식의 희박, 도덕적 해이와 재정 감시 소홀 등을 야기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초래
-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책임에 상응한 자주재원의 확보와 함께 재원보장·재정균등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보완이 요구됨.
  - 지방정부 역할 및 지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충 등을 통해 소득 및 소비과세 중심의 세원이양과 지방세제 개편
  - 세목·세율 설정과 관련한 과세자주권을 신장하고 선택세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 및 포괄보조금화 추진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충 등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의 정비·보강이 요구됨.

### CONTENTS

####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자치와 분권은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세계적 추세이자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 국가운영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대적 전략 과제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현실적 성공조건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자치와 분권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적 분권과 재정분권 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특히 재정분권의 수준이 낮아 자치를 위한 자주적 재정기반 취약함.
  - 따라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재정력의 확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원인을 검토하고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지방재정구조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개선 과제와 정책대안을 검토·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둠.

## 1) 지방재정의 현황

-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세수와 지출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격차를 중앙정부 재정이전으로 보전함으로써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임.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인데 비해 최종적인 세출(지방교육재정 포함)은 4:6으로 역전됨 (조세수입과 세출 가용재원액 참조).
- 지방정부 세수와 지출 간의 괴리는 점차 더 확대되면서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한 현재와 같은 중앙 의존적인 재정구조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아래 <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참조

구 분	특광역시	도(특별시)	시	군	자치구
단체수(244)	7	9	73	86	69
평 균(%)	69.1	34.8	37.1	16.4	36.0
최 고	88.7(서울)	61.7(경기)	63.0(성남)	46.3(울주)	81.5(서초)
최 저	41.1(광주)	14.6(전남)	8.3(남원)	7.8(고창)	13.6(영도)

출처 : 안전행정부 재정고(<http://lofin.mospa.go.kr/>, 2012년 기준)

- 근본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에다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재정 여건으로 인해 만성적인 자원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방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 중앙집권적 의존적 재정구조의 문제점

-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지출 경비를 충당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매우 부족한 세원배분 하에 과세자주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이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수입과 세출 양자를 통제하는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시스템의 특징을 보임.
- 지방세출 규모에 비해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과 소득·소비과세의 국세 편중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세수의 빈약성을 보이는 데다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재정적 자율성의 제약과 자치 기반의 약화 초래.
-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재정적 자율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를 야기함.
  - 게다가 저성장체제로 전환되면서 국세 세수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재정이전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중앙정부 재정 부담의 지방 전가로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1) 세원이양 및 지방세제 개편

-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재정력 확보, 재정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지출책임에 상응한 자주재원의 확충, 즉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 중심의 세원이양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구조의 개선이 요구됨.
  -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세출의 비중 4:6에 근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세원이양 확대 추진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의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에서 소득 금액으로 변경·독립세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와 함께 세원이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의 해소와 응징과세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비례세율제도(3% 이상)를 도입.
- 지방소비세의 단계적인 확충과 함께 세수배분 지표의 개선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교부세적 성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 다각도로 필요.
  - 현행 부가가치세 세수 5%(2.97조) 수준인 지방소비세 규모를 '14년 10%(5.94조), '15년 이후 20%(11.88조)로 단계적 확대
  -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6%p 인상 계획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세원이양이나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의 관점은 누락되어 있음.
- 기타 개별소비세의 일부 지방이양과 지방환경세의 신설 적극 검토 필요.

## 2) 과세자주권의 신장 및 신세원 발굴

- 지방세수의 증대와 함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과세자주권의 신장 이 요구됨.
  -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조례로 과세할 수 있는 법  
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권 부여.
  -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세의 확충과 과세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원으로 적합한 신세원 발굴이 필요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방세원화하는 방안으로서는 선택적 과세제도의 확대 적용을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 세입분권의 진전이 지역발전의 격차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완충기  
능이 매우 중요하고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복잡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  
는 지방재정수단들 간 역할분담의 재설계를 비롯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이 요구됨.
-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충실화를 위한 교부세 재원의 확충,  
교부세 산정방식의 합리화 및 지방이양 사회복지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후 분권교부  
세와 보통교부세의 통합 등이 요구됨.
- 유사중복사업, 성과부진사업, 소액사업, 지역동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통  
폐합 및 포괄보조금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신청 집행 절차의 간소화 및 중앙통제 축  
소, 지방정부의 재량성 확대
- 지역간 재정균형과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재정균형화를 최우선 목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부동산교부세 및 지역발전회계의 일부 재원을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4) 취득세 영구 인하 대응 및 문제 - 중앙지방 간 협의체제 법제화


- 작년에 이루어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8.28대책)로 2.4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중앙정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증액을 통해 보전하도록 요구함.
- 지방세 증액에 의한 세수보전대책의 요구뿐만 아니라 차제에 중앙정부 일방적인 지방세제 개편 결정과 사후 임시방편적 땀질식 세수보전대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대등 협력적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의체제를 법제화하여 지방의 국정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분권의 수준이 매우 낮은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구조로서 자치를 위한 자주적 재정력 확보가 곤란하며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약, 비효율성 및 책임성 저하의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치와 재정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을 낮추고 세입·세출 자기결정권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지출책임에 상응한 자주재원의 확보와 함께 재원보장·재정균등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보완을 통한 대등하고 협력적인 재정관계의 정립이 요구됨.
  - 지방정부 역할 및 지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충 등을 통해 소득 및 소비과세 중심의 세원이양과 지방세제 개편이 요구됨.
  - 세목·세율 설정과 관련한 과세자주권을 신장하고 선택세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기반 조성
  - 국고보조사업의 정비·감축 및 포괄보조금화의 추진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세원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충 등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의 정비·보강이 요구됨.
  - 이와 함께 중앙-지방간 협의체제를 법제화하여 지방의 국정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재정분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분권개혁실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중앙권력의 반대논리의 극복과 지지세력의 확산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논리 및 합리적 대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분권이 국민의 혈세와 삶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주민, 국민들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는 개혁의제의 발굴

·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적 담론의 형성과 확산 노력 요망. 

**이 정 만** 교수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041-850-8466, leejm21@kongju.ac.kr

**고 승 희**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041-840-1231, kosh@cdi.re.kr

## ◆ 참 고 자 료 ◆

라휘문. 201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논거 및 대안”. 「GRI논총」, 경기개발연구원. 14(3): 5-32.

박병희. 2012.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입 자주성 확대”.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박상수임민영. 2011. 「지방소득세 확대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배인명.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지방재정」2013년 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3.

배준식 외. 2011.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배진환. 2013.8.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위기의 지방 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국회지방자치포럼 정책토론회 발표논문집). 국회지방자치포럼.

서정섭·조기현.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손희준. 2011. “지방자치 20년 : 지방재정의 평가와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pp. 3~30.
- 손희준 외. 2011.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발주 수탁과제보고서.
- 송상훈 외. 2011. 「분권시대 지방교부세 발전방향」. 경기개발연구원.
- 유태현. 2012.5. 「지방소비세 발전방향」. 『2012 지방세발전포럼 춘계 지방세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유태현. 2009.12.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발전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통권 제24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 이원희. 2011.5. 「지방소비세제의 확대 발전방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 지방 재정세미나 발표논문』.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이재원. 2011.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여건과 정부간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2011년 지방 재정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재은. 2011.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발전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여름호, 통권 169호: 33-77.
- 이재은. 2009. 「소득할 주민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용역보고서.
- 이정만·라휘문·유태현·조기현·고승희. 2013. 「대등·협력적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 이정만. 지방재정분권의 현실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 이정만. “제3장 중앙-지방 간 재정적 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일 지방자치 비교」. 대영문화사. 2010.
- 조기현. 20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책적 의의와 향후 운용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9월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 84~106.
- 최병호. 2010.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8호. 3-22
- 최재경. 지방재정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지방재정」. 2013년 2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2013.
- 안전행정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충남리포트(2008~)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 · 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 · 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 · 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 · 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 · 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 · 이선희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 · 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효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 · 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 · 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 · 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 · 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효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3-04	에코유지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마아·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허남혁 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이민정	2013.08.09
2013-09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이관률	2013.08.23
2013-10	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지역경제분야-	김양중	2013.09.02
2013-11	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	윤정미	2013.09.16
2013-12	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	김종화	2013.10.24
2013-13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이인희	2013.11.15
2013-14	유류사고 이후, 태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산업 발전방안	김종화	2013.11.18
2013-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백운성	2013.11.19
2013-16	충남 스포츠마케팅 추진방안과 과제	김경태	2013.11.20
2013-17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	이관률	2013.11.21
2013-18	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김양중	2013.12.19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